

불평등 해소방안으로서 재산재분배정책과 조세정책

- 김정진 (변호사)

1.서설

- 0 소득불평등은 재산불평등에서, 재산불평등은 부동산 불평등에서 유래
- 0 조세 정책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
- 0 소득불평등, 재산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및 재산 재분배, 조세정책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 필요

2. 재산 및 소득 불평등 현황 (1)

0 자본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이른바 피케티지수를 1966-2013년도 한국에 적용해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3년 한국의 피케티지수는 국부를 기준으로 800%대인 것으로 분석

- 선진국들의 피케티지수가 500-600% 범위

0 2020년 한 의원실에서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받아 2010~2019년 피케티지수를 산출하여 본 결과 2010년에 7.6(760%)에서 2019년 8.6(860%)으로 상승하였다고 함

2. 재산 및 소득 불평등 현황 (2)

O 46개국 부의 집중도를 산출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5년 부의 상위 1% 집중도가 한국은 34.1%에 달함.

- 2015년 현재 부의 1% 집중도가 우리나라 보다 높은 OECD 회원국은 터키(54.3%), 칠레(43.2%), 체코(39.0%), 이스라엘(38.7%), 미국(37.3%), 스위스(34.8%) 등 6개국 뿐이라고 함.
- 이 조사가 시작된 2000년도만 해도 한국의 1% 집중도는 22.7%로 벨기에(17.6%), 일본(20.3%), 영국(20.5%), 호주(21.2%), 핀란드(22.2%)에 이어 OECD 국가들 가운데 여섯 번째로 부의 1% 집중도가 낮은 나라

3. 부동산 등 재산 재분배 정책과제(1)

가. 재분배 필요성

- 1) 소득불평등은 재산불평등에서 유래함.
- 2) 재산은 사회 전체의 기여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기도 함
- 3) 재산불평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불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재산 내지 재산가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노예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음.
- 4) 재산재분배는 정도의 차이일 뿐 지금도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재산 재분배는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마다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음.

3. 부동산 등 재산 재분배 정책과제(2)

나. 현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

1)서설

2)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

3)보유세율의 뒤늦은 인상

4)대출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

3. 부동산 등 재산 재분배 정책과제(3)

- 1) 국민들의 최소 자산 형성권 보장
- 2) 토지 및 주택 소유상한제 도입
- 3) 부동산 부유세 도입
- 4)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
- 5) 권리금 최저보장제의 실현

3. 부동산 등 재산 재분배 정책과제(4)

- 6) 노동자가 아닌 이해당사자들의 각종 단체 설립 지원 및 권한 부여
 - 7) 노동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우선매수 특례 인정
 - 8)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사업에 관한 참여 및 배당권 인정
 - 9) 각종 자치조직에 대한 지위보장
 - 10) 부채조정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
- 가) 현황 나) 부채 30년 소멸제도 시행 다) 이자 총액 상한제를 도입한다

4. 조세 정책 개혁과제 (1)

가. 서설

나. 한국조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

1) 서설

2) 낮은 조세부담율

3) 낮은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비중

4) 낮은 개인소득세 비중

4. 조세 정책 개혁과제 (2)

< 표3 : OECD 회원국, 1인당 GDP 대비 조세부담을 비교 >

항목	5천달러 달성연도 (1989, %)	1만달러 달성연도 (1994, %)	2만달러달 성연도 (2006, %)	3만달러 달성연도 (2017, %)
한국 조세부담율(K)	16.3	18.9	23.6	26.9
조세부담율 평균(A)	28.4	31.4	34.7	35.1
한국과의 차이 (D1=A-K)	12.1	12.5	11.1	8.2
유럽조세부담율 평균(AE)	31.1	35.4	37	37.6
한국과의 차이 (D2=AE-K)	14.7	16.5	13.5	10.7

4. 조세 정책 개혁과제 (3)

다. 과거 조세 개혁 정책 평가

- 1) 서설
- 2) 진보정당의 조세개혁 정책 평가
- 3) 민주노총 조세개혁 요구사항 평가

라. 변화된 상황

- 1) 서설
- 2) 과표양성화 진전
- 3) 재산불평등 심화
- 4) 세제의 복잡화

4. 조세 정책 개혁과제 (4)

마. 대안과 전략

1) 서설

2) 1단계 :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빈부격차 완화

3) 2단계 : 부유층 과세 강화 및 기업 책임 강화

4) 3단계 : 세제단순화 및 누진적 보편 증세 강화

5) 4단계 : 체계적인 자산 재분배 정책의 제도화

4. 조세 정책 개혁과제 (5)

바. 소결

0 조세개혁은 복지확대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. 조세개혁이 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복지확대 또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.

-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어 오지 못했던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이다.

0 조세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부분에 대한 신뢰, 복지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효능감 증대 등이 동시에 제고되지 않으면 안된다.

- 건강보험 제도가 상대적으로 커다란 저항 없이 확대된 것은 적절한 가격의 의료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의 지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. 마찬가지로 조세개혁 또한 복지와의 관계에서 시민들의 구체적 지지가 계속 확인되는 정치적 과정이 확인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.

5. 결어

0 세계적으로 선출된 집단들이 시민들의 삶을 해결하지 못하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음

0 이는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현존 체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기존 체제가 받아 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

0 정답이 없는 시대에 기존의 조세정책 재검토 뿐만 아니라 자산 재분배 정책에 관해서도 노동계가 전체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.